

다산포럼

가상통화와 법정통화



전 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지난해 겨울, 가상통화(crypto currency)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열풍이 한국 사회 전역을 뒤흔들었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가상통화 강국에서도 가상통화 버블과 가상통화 가격의 급등락이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다.

사실 화폐는 우리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늘 따라다니지만 정작 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40~50년 전 한(F. Hahn)이라는 경제학 대가도 화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실도했을 정도였다. 21세기 들어 화폐를 제대로 진지하게 연구해 왔던 학자들이 화폐에 대해 내린 결론-화폐는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그 무엇!-은 화폐가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하물며 가상통화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은 더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다. 법정통화는 중앙의 통화 당국에 의해

간접 통용성이 부여되어, 모두에게 보편적 수용성을 갖는 일종의 사회적 제도이다. 법정통화는 지폐와 주화 등의 현금과 각종 예금 형태를 띠며 계산 단위, 교환 수단, 가치 저장(축적) 수단 기능을 수행하는 결제 시스템 그 자체이다. 이에 비해 가상통화는 지폐나 주화 등 눈에 띄는 형태의 물리적 실체를 갖지 않지만 전자적으로 거래 가능한 전자적 가치의 표상이다. 결정적으로는 가상통화가 법정통화의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가상통화의 제공으로는 채권=채무 관계가 최종적으로 청산되지 못한다. 끝으로 가상통화에는 정부나 중앙은행 등 특정한 관리 주체와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거래 주체로 들어오는 모든 참여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거래하고 관리한다.

보증도 통제도 없는 화폐

주식과 채권은 배당이나 이자와 같은 현금 흐름(cash-flow)을 낳지만 가상통화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가상통화에는 금리도 없고 중앙은행의 보증도 없다. 끝으로 가상통화에서는 법정통화처럼 유동성 부족 시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에 가치가 붙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원래 가치

가 없었는데 언젠가 시장 참여자들이 가상통화의 유용성에 대해 신뢰하기 시작하면 이 신뢰에 기반하여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 이처럼 가상통화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형성되고 확장되면, 그 이후에는 가상통화의 가치가 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특이한 것은 가상통화 특히 비트코인의 공급에는 최대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8년 3월 6일 현재, 가상통화의 수가 1541개에 달한다.

이 모든 가상통화의 시가 총액을 합친 금액은 약 4600억 달러를 넘어선다. 가장 많이 알려진 주요 가상통화로는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리플(Ripple) 등이 있다.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은 약 1919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가상통화 전체 시가 총액의 41.6%를 차지한다. 비트코인 거래량은 일본·미국·한국·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청년과 주부를 중심으로 약 300만 명이 유비, 빚성 등의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2017년 12월 초 기준, 한국에서의 가상통화 거래가 전 세계 거래의 4분의1을 차지할 정도이다.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中本 哲史)라는 닉네임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가 고안해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10월 www.bitcion.org에 게재된 논

문 'Bitcoin :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에서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가 처음 소개되었다. 여기에는 중앙기관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가상)통화를 만들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자유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앙의 통제와 관리를 체질적으로 혐오하는 아나키스트적 정서가 존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래 사회적 문제 대비해야

'현재 진행형'의 가상통화 현상이 어느 정도 성장·발전할지는 미지수다. 가상통화가 법정통화를 대체할 상황을 상정하긴 당분간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가상통화 현상이 정부 당국들의 규제로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연금, 뮤추얼펀드, 헤지 펀드 등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가상통화의 선물 거래 나아가 가상통화 상장지수펀드(ETF)에 적극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상통화 가격의 급등락이 기존 금융 시장의 동요뿐만 아니라 금융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와 만반의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NGO칼럼

'미투' 끝나지 않았다



김 경란
(사)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지난 8일에도 전국에서 기념 집회가 열렸으며, '미투', '위드유'를 외치는 여성들의 하나 된 함성이 울려 퍼졌다. 한 언론사는 '우울한 여성의 날'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대한민국의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우리 사회의 모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미투' 운동에 끝까지 함께 한다는 여성단체의 목소리를 기사로 내보냈다. 이번 '미투' 바람 현상은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성의 상하 관계 위압감으로 오랫동안 삶속에서 있었던 것들이 표면화되는 현상이다. 어찌 보면 "그동안 잠재해 있던 것들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침묵의 목소리가 깨어난 것이다. 전여욱 방송인은 '여의도엔 수많은 안

희정이 있다.'고 했다. 이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 장난처럼 시작된 일상적인 성추행, 성폭력 등 여성을 대하는 남성들의 사고의 변화가 '미투' 바람의 영향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1992년 방영된 드라마 '아들과 딸'은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성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남야 선호가 뿌리 깊은 집안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귀남이와 후남이 이야기는 가부장적이며 남성 중심의 사회의 가치관을 잘 드러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2018년이다. 이제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에코페미니즘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성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폭력 고발 운동 확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약자인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 국회의원 수는 훨씬 적다. 대한민국의 여성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1998년 여성 할당제가 정당법에 명시돼 정치 진출이 용이해졌으며, 여성 의

원 비율이 높아졌다. 17대 국회에선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그 전의 19명에서 39명으로 급증했으며, 20대 국회 여성 의원 수는 51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20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인 17%는 국회의원 연맹(IPU)에서 100위원 안에도 들지 못하는 수준이며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직 선거법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 할당을 명기하고 있지만 어떤 정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광주 지역 선거구에서 여성의 비율을 확대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성될지는 미지수다. 양극화와 성문제 등 한국 사회가 격고 있는 사회 이슈나 부조리에 대해 잠재해 있던 여성의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나온 최근의 '미투' 운동은 양성 평등을 위한 관습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성 평등의 제도적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 지역 여성단체들도 여성 공천 관련 성명서를 통해 각 정당에 여성 정치 기회 확대를 요구했다. 이러한 여성의 외침과 소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성들의 권리와 인권을 위해 여

성 공천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어 여성 인재들의 정치 참여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미투' 운동과 함께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성 평등의 외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추행 사건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명분하에 이른바 '펜스 룰'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사회생활에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과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의 관념화된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차별적인 상황들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행정부와 사법부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별간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입법부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 차가 크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에코페미니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 공천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올 봄은 더디다. 그 이유가 우울한 세계 여성의 날 '미투' 운동의 시대적 상황과 함께 가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이제 성평등을 있어 침묵의 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남성 모두가 평등한 미래로 가야 할 것이다. '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기 고

'공공 의대' 신설과 광주기독병원



최 응수
광주기독병원장

농어촌이나 도서 벽지에 의사가 없어 환자가 대도시로 이송 중 위기를 맞거나 산부인과가 없어 임신부가 출산 예정일 전에 도시권 병원에 입원하느라 불편을 겪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지원자가 없어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진료 분야도 하나 둘이 아니다. 이 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서비스 분야를 확충해 국민의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의료의 공공성 문제를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그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제기된 것이 공공의료 전문의대의 설립이다. '공공 의대'는 국비로 의

대생의 교육을 지원하되, 졸업자는 10년 이상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개념이다. 공공 의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포럼에서 공보의 감소(2009년 5287명→2016년 3495명), 공공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논의가 됐다. 국회에서도 '공공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올 1월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과 3월 이흥호 의원(무소속)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는 공공 보건 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공공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의료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주의나 사업으로서의 이권 등에 휘말리지 않고 공공의료라는 취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면 단기간 필요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기존 대학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공공 의료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의 공공성, 특수성 확보가 어렵다. 전국에 국립병원과 민간병원이 이미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지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공공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도 중앙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과 의사인력 불균형을 감안하면 취지에 맞지 않다. 현재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지방 의대를 졸업 후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함에 따라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공공 의대는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이지만, 특정 지역 병원을 신축하는 목적이 아니라서 안 된다. 따라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도서벽지와 농어업 비중이 높은 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공공 의대의 설립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의대생의 수련 병원역할을 할 수 있는 부속병원 유무이다. 전남 지역에 공공 의대를 설립한다면 현재 수련병원인 광주기독병원과 전주예수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들 양 병원을 공공 의대 부속병원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병원을 설립해야 하는 자

원의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북, 즉 호남 지역의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기에 안성맞춤일 것이다. 광주기독병원은 의사 수련 교육병원과 교수 인력, 기독간호대학, 의과대학 교육 시설부지 등 인프라가 이미 확보돼 있고, 지난 113년간 지역 보건요리를 위한 광주·전남 대표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주예수병원과 형제병원으로서 협력병원 체계 유지가 원활하다. 생존을 위한 경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일반 병원과 달리 광주기독병원과 전주예수병원은 지난 100년 이상 호남 지역 공공의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향후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지역의 부족한 의료 전문 인력에 대비할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서벽지와 농어업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인 전남 지역에 반드시 공공의대가 설립돼야 한다. 더불어 광주기독병원과 전주예수병원은 준비된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서 호남 지역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책임자임을 자신한다.

社 說

'80대책위'의 5·18 왜곡·조작 철저히 규명을

지난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를 앞두고 '육군 80대책위원회'와 '511상설대책위원회'라는 군 조직이 꾸려져 5·18 민주화운동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들은 발포 명령과 진압 과정, 희생자 숫자 등 5·18 핵심 의혹들을 왜곡하는 데 몸통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국방부의 '511연공위원회 관련 자료 검증 결과'에 따르면 국회 광주 청문회를 앞둔 1988년 2월 16일 꾸려진 '육군80대책위원회'(이하 80대책위)와 같은 해 7월 11일 구성된 '511상설대책위원회'(511대책위)가 5·18 왜곡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80대책위는 육군 참모차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18명으로 구성된 국방부·보안사·특전사 등이 보유한 5·18 핵심 자료 20종 94건을 수집·보완했다. 511대책위는 조작된 자료를 넘겨받아 광주 청문회의 거짓 증언 근거 자료를 작성했다. 80대책위는 특히 계엄군이 대검으로 민간인을 살상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위 진압 작전 교본에서 '대검 휴대'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계엄군의 사격 시기를 삭제하고, 사망자는 검시 결과를 기초로 안기부에서 재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집단 발포 시기와 희생자 숫자를 왜곡했다. 이들 조직은 그동안 대표적인 5·18 왜곡 조직으로 알려진 '80위원회'(1985)와 '511연구위원회'(1988)와는 다르다.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5·18 역사 왜곡은 이처럼 집요했다. 5·18 당시와 직후는 물론 자신들의 집권기에 조직적으로 왜곡을 일삼았다. 얼마나 심했으면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군 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짜와의 전쟁'이라고 토로했는가. 전 씨는 최근까지도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회고록 등을 통해 버젓이 왜곡을 일삼고 있다.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5·18 특별법에 따라 꾸러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80대책위를 포함한 군 조직의 5·18 왜곡 활동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민간공원 개발, 논의과정 거쳐 좀더 신중하게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이른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개발 사업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 시점인 2020년 7월 1일에 맞춰 2단계 사업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안 접수와 공고, 우선협상사업자 선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중앙·일곡·중외 등 2단계 대상 공원의 경우 규모가 워낙 커, 광주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대규모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단계 사

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안서 공개 검증이나 심사 과정 및 결과 공유 등을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2~3개월 일정을 연기하고 좀 더 속의 한다고 해서 2년 후에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 1단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2단계 제안 공고를 하게 되면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개발로 생겨날 수 있는 도시 문제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속의하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공원 보존 및 개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민간사업자 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공성 향상을 조건으로 공공기관과의 협약 체결 조항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無 等 鼓

"차갑더라도 풀 먹인 옷은 다듬잇살이 올라야 하고 뒷뚱까지 봉하더라도 차야만 겨울 맛이아 저녁상에 된장이 향그러운 날은 으레 바깥날이 왔고 수선이 송송 감에 얼었던 고개를 들고 안해의 붉은 손이 동치미 그릇에서 얼음 쪽을 끌러내는 것은 먹어 봐야만 느낄 맛이 아니라라..." 소설가 상허 이태준(1904~미상)의 수필 '매화'의 첫 문장이다. 그는 차가운 추위 속에서 꽃을 피우는 매화의 본성을 얘기하면서 '매화란 고운 꽃이기보다 맑은 꽃이요 달기보다 매운 꽃'이라고 묘사한다. 수필가 김진섭(1908~미상) 역시 '매화 찬(讚)'에서 매화를 볼 때마다 항상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감정에 불타고 마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면서 "첫째로 그것은 추위를 타지 않고 구태여 한풍(寒風)을 택해서 피기 때문이요 둘째로 그것은 그럼으로써 초지성적인, 비현세적인 인상을 내 마음속에 던져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식물과 나무들은 겨울이 몰라가고 봄이 성큼 다가옴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계절의 변화를 앞서 준비하는 생명들이 신비롭기만 하다. 겨울이 다

넙에서부터 시나브로 복상하고 있을 것이다. 섬진강가 광양 매화 마을과 구례 산수유 마을은 머지않아 하얗고 노란 꽃빛깔로 채워질 터이다. 이에 따라 상춘객들은 또 구름처럼 물러가겠지만 멀리 전해오는 화신(花信)만을 굳이 쫓아가려 애를 들은 아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만 그보다는 점심 후 일터 근처 공원에서 봄벌을 쫓거나, 개화를 앞둔 꽃망울을 바라보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봄은 어느새 생활 공간 주변 그 어디에도 성큼 다가와 있으니가. /송기동 예향부장 song@

생명의 시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